

신속 신용회복지원제도 정책시행 배경과 시사점

전 동 주(한국주택금융공사 대리)

- ☑ 정부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발표('24.2.6)하여 소액 연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신용회복 기회제공
- ☑ 동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 및 우려 요인을 살펴보고, 과거 신용회복지원제도와와의 차별성 또한 살펴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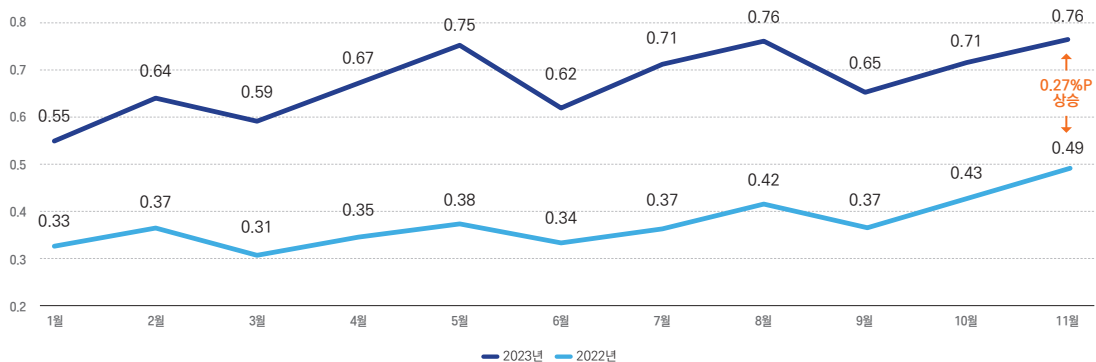
● '21년 9월 1일부터 '24년 1월 31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액(2천만원 이하)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신용회복지원 제도 발표('24년 2월 6일 발표)

- 지원 대상기간 동안 소액 연체 채무자를 확인한 결과 약 298만명으로, 이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이며 미상환 채무자는 39만명으로 파악
- 전액 상환자에 한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('24년 3월 중)할 예정이며, 미상환 상태인 채무자 약 39만명은 '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추가로 신용회복지원 제도 지원

● '23년 이후,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 연체율이 뚜렷하게 상승 중

-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(가계신용대출등) 연체율 추이에 따르면, '23년 11월 말 기준은 0.76%로, '22년 11월 말(0.49%) 대비 0.27%p, '22년 가장 낮은 연체율(3월, 0.31%) 대비 0.45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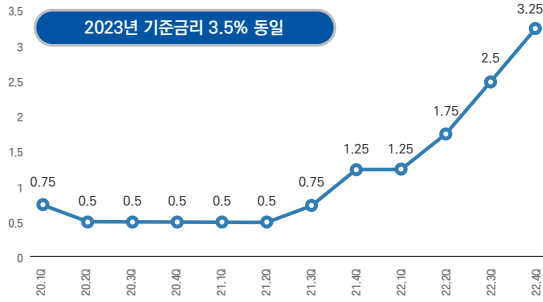
〈2022·2023년도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(가계신용대출등) 연체율 추이〉



※ 자료: 금융감독원(2023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)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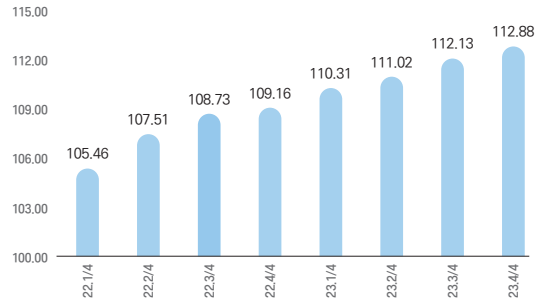
- 연체율 상승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이후 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지속적인 생활물가 상승 영향으로 파악('23년 4분기 기준 '22년 1분기 대비 7.42%p 상승)

<2020 ~ 2022년도 분기별 기준금리>



※ 자료: 한국은행 기준금리 활용

<2022·2023년도 분기별 생활물가지수>



※ 자료: KOSIS 소비자물가지조사 생활물가지수 활용

❁ (소액대출) 까다로운 심사절차 없이 간편하게 대출 신청과 승인이 가능한 소액대출 또한 연체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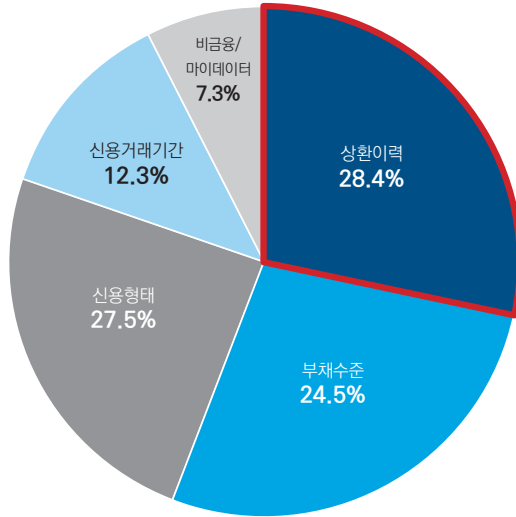
- 소액대출이란,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을 의미하고 1년 단위 만기일시상환인 경우가 다수이며
- 대출승인 시 소득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액이라도 연체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금융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파악
-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 직면한 국민을 위하여 연체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지원하기로 결정(정부)

❁ 연체이력정보는 NICE신용평가정보(주)에서 산출하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중 '상환 이력(28.4% 비중)'에 포함되는 정보인데,

- 먼저 개인신용평점이란, 개인신용평가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, 향후 1년 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를 의미하고,
- 상환이력정보란, 개인이 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과거 채무 연체 경험에 대한 정보를 의미
 - CB단기연체정보(10만원 이상,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)를 포함하여 개인신용평점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변제하더라도 3년 동안 개인신용평점 산출 시 활용되는 정보이므로,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

- 개인신용평점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실행이나 카드개설에 활용되며, 우리 공사 또한 보금자리론 취급 기준에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규정이 있는 만큼 개인의 금융생활에 개인신용평점은 중요한 영향

〈개인신용평점의 주요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〉



※ 자료: NICE신용평가정보(주) 홈페이지

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신용회복지원 현황

- 이번 사례 이외에도 정부는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등 심각한 경제위기극복 및 금융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및 연체정보 기록을 삭제하는 정책 실시

〈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 현황〉

시행연도	추진내용
2000년	외환위기 기간('97.11월~'99년 말) 동안 발생한 소액 연체금(1천만원 이하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카드대금)을 '00년 3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(32만명)
2001년	채무불이행자 중 '01년 5월 31일까지 연체가 상환된 자(102만명)
2021년	코로나19 피해기간('20.1월~'21.8월 말) 동안 발생한 연체(2천만원 이하 연체 및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)를 '21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소상공인(약 228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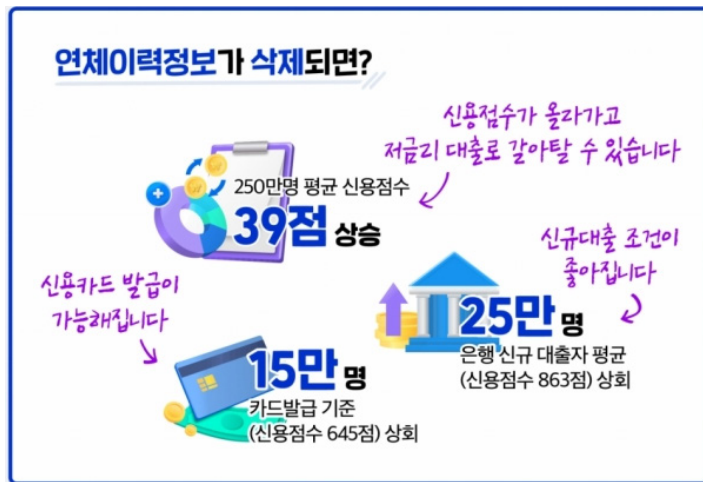
※ 자료: [(기사) '24.1.8., "소상공인 200만명 신용사면 이달중 재건축 규제해서도 예고", 서울경제] [(기사) '21.8.12., "230만명 신용사면 대상자는 누구(종합)", 이데일리], [(기사) '00.1.17., "금융사면 대상자 16일 일괄 삭제", 경기일보], 금융위 보도자료

- (차이점) '00년 실시한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비해 연체 대상금액(경제성장률 감안)이 상향 조정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나,
- (공통점)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신용회복지원 대상이며, 연체 상환기한을 정책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여 추가 채무변제를 유도한 점은 동일

❖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개인 신용악화,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의 악순환을 절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우려의 시선도 존재

- (긍정적 측면) 연체이력정보를 보유한 개인이 금융시장에 재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회복 및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
-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 증지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,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개설 및 기존보다 더 좋은 대출 조건으로 변경 가능
 -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시행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신용점수(NICE 기준)는 39점(평균)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
 - 상승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,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25만명은 은행업권의 신규대출자 평균신용 점수를 넘게 되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

〈신용회복지원 관련 인포그래픽〉



※ 자료: 금융위원회

- (부정적 측면) 도덕적 해이 및 성실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, 나아가 개인신용평점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
- 반복적으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저신용자가 대출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, 이는 향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위험 초래
 - 실제 '03년도 기사에 따르면, 과거 2차례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비율은 약 20.0% 수준

시행연도	신용회복자	신용불량자 재등재자	재등록률
2000년	117,764	27,545	23.4%
2001년	374,060	76,585	20.4%

※ 자료: (기사) '03.5.20. "신용사면자 신용불량 재등록률 20% 넘어", 연합뉴스

과거 IMF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, 이번 제도는 위기로 심화되기 이전 선제적 정책이라는 점이 차별적

-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,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경제난이 가시화되기 전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됨

신용회복지원제도의 중요성은 금융지식 부재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구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예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

- 연체 발생 사유 중 하나가 적절한 금융교육의 부재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, 현 금융제반 환경은 적절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
- 소액 연체 전액 상환자의 재정 건전성이 증진될 경우, 금융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소비활동 촉진 등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

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 대비 단발적 정책 시행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불량 재등록률을 감소할 수 있게 노력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 필요

- 연령별로 금융거래정보가 개인 신용점수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지시키는 금융교육을 증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사전관리도 강화 필요
- 또한, 성실 상환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용금융 실현 필요

HF 한국주택금융공사



참고문헌

-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, “서민·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재기의지가 있는 ”전액상환자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2024.1.16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“서민·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.”, 2024.2.6.
- 금융감독원,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, 2023년 11월 말
- 한국은행, 기준금리
- KOSIS, 소비자물가조사 생활물가지수
- 서울경제, “소상공인 200만명 신용사면 이달중 재건축 규제해서도 예고”, 2024.1.8.
- 이데일리, “230만명 신용사면 대상자는 누구(종합)”, 2021.8.12.
- 경기일보, “금융사면 대상자 16일 일괄 삭제”, 2000.1.17.
- 연합뉴스, “신용사면자 신용불량 재등록률 20% 넘어”, 2003.5.20.